

사회관계장관회의	
회 차	2021-15 (3호)
안전유형	심의

「공정성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 보완방안」

점검결과 및 향후계획(안)

2021. 8. 25.



목 차

I. 추진 배경	1
II. 추진현황 점검 결과	
1. 주요 추진실적	2
2. 보완 필요사항	12
III. 향후 추진과제	
1. 공공부문 공정성 확립	13
2. 공정한 경쟁기회 제공	15
3.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	16
4. 불공정행위 사전예방 및 적발·제재 강화	20
<붙임1> 주요 추진실적(요약)	22
<붙임2> 세부과제별 추진현황	24
<붙임3> 향후 추진과제 세부일정	27

I. 추진 배경

- 국민이 체감하는 **공정사회** 구현을 위해 사회 관계부처 합동으로 **사회 분야 공정성 향상**을 위한 과제 수립(‘20.10.30.)
 - 누구에게나 **공정한 경쟁기회**와 환경을 제공하고, **불공정 사례**는 **엄정하게 조치**하기 위한 4대 정책과제 및 80개 세부과제 제시

< 참고 : 「공정성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 보완방안」(‘20.10월) 주요 내용 >

구분	영역	주요 과제
공정한 경쟁기회 제공	채용	▲(공공) 숭기관 필기 또는 구조화면접 채용, 위탁채용 가이드라인 마련 ▲(민간) 사학 채용비리 엄정 처벌, 채용절차법 위반조사 강화
	입시	▲대입 공정성 강화방안 이행관리 철저 ▲'28 대입개편 준비 착수
공정한 근로환경 조성	계약	▲서면계약 실태조사 실시 ▲표준계약서 개발 확대 및 활용 강화
	안전	▲하청노동자 보호 강화 ▲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개선
불공정행위 처벌 강화	성평등	▲기업 대상 성별다양성 컨설팅 지원 ▲가족친화 인증제 내실화
	체육	▲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방안 마련 ▲인권 침해 전수조사
	교육	▲사립대 종합감사 실시 ▲대학교원징계위원회 운영 개선
국민 삶 속 불공정 해소	문화	▲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정 ▲방송영상독립제작사 불공정행위 예방·제재
		▲SNS상 부당광고 근절 ▲콘텐츠 구독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▲산업지원 병역의무 공정성 향상 ▲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수수료 개선 ▲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▲학교 주관 교복 구매 불편 해소

- 과제 발표 이후 **관계부처 협력** 하에 **공정성 제고**를 위한 정책 이행 등 다각도의 노력을 펼치고 있음에도,
 -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**불공정 사례**는 여전히 우리 주위에서 **발생**하고 있으며, 국민은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

☞ 「공정성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 보완방안」의 **이행 상황**을 점검하고, **개선 및 추가과제 발굴** 등을 통해 국민의 '**공정**' 체감도 제고 유도

II. 추진현황 점검 결과

- ◆ **총 80개** 세부과제 중 **31개 과제**는 **이행완료**되었으며, 나머지 **49개 과제**는 **정상적으로 추진** 중
 - 다만, **공정**에 대한 **국민 체감도** 제고를 위해 일부 과제는 **조속한 입법 추진**이 필요하며, 새로운 이슈에 대한 **선제적·적극적 대응** 필요

1 주요 추진실적

1 공정한 경쟁기회 제공

□ 공공부문 채용의 공정성 확립

- (채용비리 점검) 사회적 이슈*가 제기된 **국토부 산하 23개 공공기관 채용 실태 특별점검** 실시(‘21.3~4월)로 부적정 채용사례 적발·조치** (권익위)
 - * LH 직원이 LH공사 주택 15채 매매 문제로 징계·퇴사한 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사례 등 / ** 채용비위(의혹) 4개 기관, 공정채용 위반 11개 기관
 - ※ 특별점검 외에도, '17년부터 매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실시 중

체감사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절차로 취업 성공(‘21.1월 권익위)

- ▶ (○공사 신규 취업자 A씨) “내가 이 회사에 부족한 인재라고만 생각했다. 한동안 좌절하다가 스펙을 더 쌓기 위해 다시 취업 준비에 매달렸다.”
- ☞ ○공사의 최종 면접에서 탈락했던 A씨는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 결과*에 따라 **채용비리 피해자**로 간주되어 **구제 절차에 따라 채용**되었음
- * 채용실태 조사를 통해 채용비리를 적발하고, 다음단계 시험 재응시 기회 부여 등을 통해 3,413명의 피해자를 구제함

- (채용과정의 객관성 제고) 지방공공기관에 **필기 또는 구조화된 면접 도입***을 위한 인사운영 기준 개정(‘21.1월) 등 규정 정비(행안부)

- (정규직 채용관행 정착)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 방지를 위한 '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제 실태조사(~21.7월) 및 미도입 기관 등 개선 지도(고용부)

※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제 도입률 : ('19) 77.9% → ('20) 88.4%

- (공정채용 역량 제고) 공공부문 채용·인사 담당자의 공정채용 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쏠기관 대상 '공정채용 컨설팅단' 운영*(인사처)

* 기재부, 권익위, 고용부 등 참여 / '20년 10회, '21년 2회 개최(3·5월)

- 공공기관 위탁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'공공기관 위탁채용 가이드 라인' 마련·배포('20.12월)(권익위)

* 필기시험 관리·채용절차 진행 모니터링 강화, 채용대행업체의 업무수행 역량정보 공유 등

체감사례 **공정채용의 긍정적 역할 공감** ('21.4월 인사처/공정채용 문화 확산 연수회)

- ▶ (A 지방국세청 채용담당자) “면접 대상자의 배경을 심사 위원에게 알리지 않고 시험을 진행하다보니,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위주로 채용시험이 이뤄져 보다 적합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”
- ▶ (B 교도소 채용담당자) “지원자의 학력 등 편견을 만들 수 있는 배경지식 없이 오로지 실질적 업무 능력만을 고려한 채용절차로, 매우 합리적이고 공정해 채용 후에도 직무성과나 만족도가 높은 편”

□ **공정채용 문화의 쏠 분야 확산**

- (사학 채용비리) 사립학교 사무직원 공개채용 및 부정행위자 조치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*('21.8월)(교육부)

* 사립학교 사무직원 공개채용 및 채용시험 시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 신설 등

- (채용절차법 현장 안착) 채용절차법 위반행위*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지도·점검('21.4~6월)을 통해 공정한 채용 관행 정착 유도(고용부)

* 주요 위반행위 : 거짓 채용광고·채용 강요·직무 무관 개인정보 요구 등 금지 위반

- (우수사례 확산) 공정채용·블라인드 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* 개최('20.12월) 및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제공('20년 700개, '21년 250개)(고용부)

* 공공부문 11개소, 민간분야 5개소 등 16개 우수사례 선발 후 우수사례집 제작·배포

우수사례 **공정채용·블라인드 채용 우수사례 선정결과** ('20.12.4., 경진대회 개최)

- ▶ ((주)오른볼) 입사 후에 배우겠다고? 나중은 없다! 2주간의 온라인 인턴십 '미니인턴'
 - ☞ 블라인드 채용전형을 통과한 지원자에게 실제 프로젝트의 일부를 과제로 할당하여 역량평가 실시
- ▶ ((주)AL네트웍스) 고급인재는 NCS 블라인드 채용으로부터
 - ☞ 차별적 요소를 배제한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발, 직무관련 구조화 면접을 통한 평가 실시
- ▶ (울산항만공사) Better than Blind - 블라인드 채용을 넘어 더 좋은 채용으로
 - ☞ 채용 전 과정 외부위원 참여 의무화, 면접 참관인 제도 고도화 등을 통해 채용 공정성 확보, 단계별 예비합격자 제도 도입으로 채용비위 피해 구제방안 마련
- ▶ (한국전력공사) 국민에게 신뢰받는 KEPCO 채용브랜드 확립
 - ☞ AI 평가봇 도입을 통한 블라인드 서류 위반사항 검증, 블라인드 위반 감점처리 기준 면접위원 제시, 면접전문가 교육 고도화 등 추진

□ **대입제도 공정성 강화(교육부)**

- (전형 간 균형 확보) '23학년도까지 서울 소재 16교 수능위주전형 40% 이상 확대 추진 결과, 당초 목표 달성('22학년도 9교, '23학년도 7교)

- (대입전형 단순화) 수능위주전형 및 학생부위주전형으로 단순화하고, 논술위주전형 및 특기자전형(어학 등) 비율 감축*

* 논술·특기자전형 : ('19학년도) 5.4% → ('20학년도) 4.5% → ('21학년도) 4.3% → ('22학년도) 4.3% → ('23학년도) 4.2%

- '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' 중간평가('21.5월) 시 평가지표 반영을 통해 논술위주 전형 및 특기자전형 감축 유도

- (대입개편 추진) 2028학년도 대입개편안 마련을 위한 미래형 대입 개편 방향 정책연구 추진('21.4월~)

※ 대입개편안 공표기한은 '24.2월까지이나, 중요성을 감안하여 '21년부터 본격적으로 분석 착수

2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

□ **공정계약 문화 확산**

- (서면계약 확대)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의무('16~) 이행 강화를 위해 서면계약 위반 신고·상담 창구 운영, 특별 이행점검 등 실시
 - (협조체계 구축)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특별전담반* 운영, 문체부·고용부 합동 문화예술분야 서면계약 현장점검** 추진 (문체부·고용부)
 - * 민주당 을지로위원회, 예술계 현장 29개 협회·단체로 구성(20.9월~ 5회) / 방송·영화·공연·만화분야 서면계약 체결 및 표준계약서 사용실태, 건의사항 등 청취
 - ** '20.11월~'21.2월 기간 동안 4회 점검 / 사업장에 근로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(현장 예술인)의 ▲ 명부와 계약서 대조 ▲ 의무 명시사항 준수 확인 ▲ 각 부처 지도·안내 등 실시
 - (편의 제고) 보다 쉽게 서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용 간이계약 양식 개발·배포 및 전자계약* 체결 지원('20.12월~)(문체부)
 - * 전자우편·카카오톡을 통한 계약서 작성·체결, 문화예술용역 전자계약 플랫폼 마련 등
- (표준계약서 확산)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유인·제재 장치를 강화하고, 변화하는 환경에 부합하도록 표준계약서 신설·보완
 - (표준계약서 활용 확대) 정부지원 사업 추진 시 표준계약서 의무사용,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표준계약서 활용도 제고(문체부)

[정부지원 사업과 표준계약서 연계 현황]

분야	연계 현황
출판	▶ 국고보조금 지원 6개 사업에 대해 지원요건으로 명시
게임	▶ '21년도 지원 과제 평가 기준에 표준계약서 사용 관련 사항 반영
미술	▶ 시각예술창작산실 등 정부지원사업 추진 시 표준계약서 활용 의무 적용
방송	▶ '21 상반기 방송영상진흥재단 응자지원 시 표준계약서 활용기업에 우대금리 적용
만화	▶ 다양성 만화 제작지원(65개 과제) 및 독립만화 출판지원(43개 과제) 사업 계약 시 표준계약서 활용 의무 적용

- (표준계약서 제·개정) <제정> 퀵·대리·배달기사('20.10월) 및 야구 등 프로 스포츠 분야 5종('21.6월), <개정> 공연예술 분야* 등('21.6월)(고용부·문체부)

* 코로나19 상황에 부합하도록 비대면·온라인 공연 활성화 관련 조항 개정 등

- (방송계 공정계약) 방송사·외주제작사 간 표준계약서 활용 등 공정계약 유인을 위해 지상파 4사·중편PP 4사 재허가·재승인 시 관련 조건 부가('20.4~12월)(방통위)
- (점검·지원)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이행 점검('21.1~6월), 공공재원 지원 16개 방송사 대상 계약서 점검('21.4~6월) 등 실시(방통위·문체부)

□ **안전하고 안정적인 일터 조성(고용부)**

- (하청노동자 보호) 공공기관·대형사업장 등 하청노동자 보호조치 실태점검 실시('20.10~11월, 400개소), 안전보건관리체계·안전조치* 등 확인
 - * ▲ 3대 보호구(안전모·안전화·안전대) 착용 ▲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 ▲ 정비·유지 및 보수작업 시 안전조치 등 점검 병행
 - (산재제도 개편) 원청의 산재보험료에 하청의 산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별실적요율제* 개편(보험료징수법 개정 '21.4월)
 - * 산재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
 - ※ (기존) 원청사업장에서 하청노동자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원청의 산재보험료는 할인되고 하청의 보험료만 할증되어, 원청이 하청의 산재발생 여부에 관심을 가질 유인 부족
- (직장 내 괴롭힘 금지) 사용자 조치 의무(사실조사·피해자보호 등)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(근로기준법 개정, '21.4월)
 - (근로감독 강화) 근로자 자살 사건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업장* 등 대상 특별근로감독 실시
 - *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('21.2월), (주)제일약품('21.2월), 네이버주식회사('21.6월) 등

- (지원 강화) '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' 10개소로 확충(20년 8개소), 영세사업장 등 대상 예방교육 지원 및 강사 양성(21.1월~)
- (소규모 사업장 적용 검토) 5인 미만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조건 실태조사 추진(20.10월~21.12월)
- (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) 감정노동 고위험 업종 대상 법정사항 이행여부, 감정노동 평가 수준 등에 대해 사업장별 맞춤형 컨설팅* 실시
 - * '20년 기준 산업안전보건공단 202개소, 민간위탁 2,021개소 제공
- (보호 가이드라인 마련)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예방·사후조치 안내 매뉴얼 마련·배포(20.11월)

□ '열정페이' 근절 노력 강화

- (대학생 현장실습) 현장실습생의 노동·안전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 발표(20.10월)(교육부)
- (안전망 강화) 열정페이 논란 해소를 위한 현장실습 지원비 지급근거 마련, 상해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등 안전조치 강화
 - * 산학협력법(20.12월) 동법 시행령(21.6월) 및 고시(21.7월) 개정 완료
- (패션스타일리스트 어시스턴트) 유명 패션 스타일리스트 운영 사업장 (6개소) 대상 근로감독(20.10~12월) 및 개선 조치(고용부)
 - *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, 최저임금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점검 후 법 위반 사항 등에 대한 개선 지도 등 조치
- (영화스태프) 제작·연출·촬영 등 스태프 근로 여건(보수 등) 파악을 위해 '20년 영화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' 추진(20.7~21.6월)(문화부)
 - 영화 노·사·단체 등 대상 설명회 개최 및 조사결과 배포 등 실시

□ 성평등한 직장 문화 확산

- (공공부문) 성희롱·성폭력 방지 및 대응 컨설팅 확대*, 예방교육 추천 콘텐츠 보급 및 고위직 대상 예방교육 자료 개발 추진(여가부)
 - * ('20) 104개소(100백만원) → ('21) 200개소(240백만원)
- (민간부문) 성평등 채용 안내서 배포(21.3월) 및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성별균형 인사관리 교육(21.4~11월) 등 역량 강화 지원(여가부)
 - (자율적 확산) 상장법인 성별임원 현황 조사·발표*, 성별다양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산업단지 내 기업 대상 성별균형 컨설팅 제공(여가부)
 - * 상장법인 여성임원 비율 : ('19) 4.0% → ('20) 4.5% → ('21) 5.2%
 - (점검 강화) 모집·채용상 성차별 여부 모니터링(21, 13천개소) 및 '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' 운영, 신고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 등 조치(고용부)
- (일·가정 양립) 가족친화 인증기업 인센티브 확대*, 기업 대상 가족친화 직장교육·컨설팅 제공 등 가족친화 문화 확산 지원(여가부)
 - * 인센티브 현황 : ('18) 186개 → ('19) 211개 → ('20) 220개 → ('21.5월 기준) 229개
 - ※ 가족친화 인증 기업·기관 현황 : ('18) 3,328개 → ('19) 3,833개 → ('20) 4,340개

체감사례 가족친화 경영 우수 사례 (20.12월, 여가부)

- ▶ ((주)풍림무악 A씨) “코로나19 이후 2시간 단축근무로 종일 집에 있는 아이들 식사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출·퇴근 시간의 혼잡함에서 벗어날 수 있어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. 저와 가족의 안전이 보장되는 느낌이 듭니다.”
 - ☞ ▲ '14년 시차출근제 도입 ▲ '20.3월 임금감소 없는 2시간 단축근무 실시 ▲ '17년 원격·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▲ 코로나19 순환 재택근무 실시
- ▶ ((주)이트너스 B씨) “회사 내 등반 동호회인 산사랑 활동을 하면서 사내 커플이 되었고 2019년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. 일·가정 양립을 지원해 주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인 회사 문화에 만족합니다.”
 - ☞ ▲ 모성 케어시스템 도입 ▲ 연차휴가계획 시스템(휴가 사용 활성화·부서장 개입 최소화) ▲ 출산 축하금 지원 ▲ 장기근속자 가족여행경비 지원

3 불공정행위 처벌 강화

□ 체육계 불공정행위 엄정 조치

- (스포츠윤리센터 강화) 체육계 인권보호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의 직권조사 권한 명시, 조사 방해·거부 시 징계요구 등 조사권 강화('21.2월~)(문체부)
- 수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수사 전담인력 확충* 및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**
 - * 경찰청 인력 파견('20년 3명), 조사관 등 인력 확충('21.6월 38명) 등
 - ** 피해자 보호지원 기준 마련('21.5월), 의료비 및 전문상담기관 상담, 법률지원 등 실시
- (학생선수 보호)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*('20.7~'12월), 인권보호 및 폭력근절 방안 등 범부처 대책 발표('20.12월, '21.2월)(교육부)
 - * 가해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학생선수 519명에 대해 해임, 직무정지, 학교폭력전담(심)의 기구 조치 등 후속조치

[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폭력근절 방안 등 주요 내용]

㉠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방안 ('20.12.11.)

- ▶(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)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 축소, 최저학력 강화, 휴식권 보장
- ▶(가해 지도자 처벌 강화) 징계양정기준 마련, 가해 운동부지도자 자격상 징계 철저
- ▶(피해예방 및 인권존중 문화 확산) 폭력피해 실태조사 정례화, CCTV 설치 근거 마련

㉡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 ('21.2.24.)

- ▶(피해자 중심 처리체계 구축) 집중신고기간 운영, 피해자 상담 강화
- ▶(제재 강화 등 예방) 선수등록·대회참가 제한, 단체별 제재규정 점검·정비,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 실시, 징계정보 통합관리 확대
- ▶(성적지상주의 문화 개선) 상시합숙 근절, 인권교육 강화, 주말리그 확대 등

- (가해자 제재) 체육지도자가 선수에게 (성)폭력, 부정·비위를 저지른 경우 최대 5년간 지도자 자격정지(기존 최대 1년) 조치('21.6월~)(문체부)
- (재취업 제한) 체육단체 등의 체육지도자 채용 시 징계이력 증명서 확인 의무화, 비위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 임직원 등의 명단 공표

- (지도자 자격 관리) 자격·처분관리 강화를 위해 문체부 산하 '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' 설치·운영, 지도자 2년 주기 재교육 실시('21.6월~)(문체부)
- (지방체육회 관리) 지방체육회 성과평가 추진('21년 신설) 및 체육분야 청렴도 측정 시 지방체육회 추가·포함('20.12월)(문체부·권익위)

□ 교육계 비리·비위 척결 문화 확산(교육부)

- (사립대학 감사) 사학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연세대·고려대 등 대규모 12개 사립대학 종합감사 실시('19.7~'21.7월)
 - * ('19) 연세대·홍익대 / ('20) 고려대·동서대·경희대·건양대·서강대·경동대·부산외대 / ('21) 중부대·광운대·영산대·세명대(광운대·영산대·세명대는 감사 처분 전)
- (성비위 교원 제재) 성비위 초·중등교원 일정기간 담임(학급담당교원) 배제*를 위한 교육공무원법·사립학교법 개정('20.12월)
 - * 성비위 유형 : 성폭력, 성매매, 성희롱 등 / 담임배제 기간 : 5~10년
- (교원자격 제한) 성범죄자의 교직 진입 원천 차단*을 위한 초·중등 교육법·유아교육법 개정('21.6월)
 - * 성범죄 관련 형사처벌 이력을 교원자격 취득 제한 요건으로 규정

□ 문화예술계 공정한 제작환경 조성(문체부)

- (콘텐츠분야) 콘텐츠공정상생센터('18.4월~)의 기능·역할 강화를 통한 콘텐츠산업 내 불공정행위(음원사재기, 저작권 침해 등) 개선 추진
 - 협·단체 연계 장르별 신고센터 확대*,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상담 및 피해구제 소송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 강화
 - * ('20) 한국방송작가협회 등 3개, ('21) 모바일게임협회 등 3개 추가
- (문화산업분야)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의무화, 임금체불 제작사에 대한 영업제재·정부지원 배제를 위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하위법령 개정('21.6월)

4 국민 삶 속 불공정 해소

- (SNS상 부당광고) 일명 ‘뒷광고’ 방지를 위한 **집중 모니터링***(‘21.4월~) 및 **인플루언서 등 대상 표시광고법 교육** 실시(‘21.6월)(공정위)
 - * 모니터링을 통해 SNS상 부당광고 발견 시 자율시정 권고 후, 권고를 불이행하거나, 위법성이 중대한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처리
- (콘텐츠 구독서비스) **자동결제 사전 고지**, 이용자가 알기 쉬운 **해지 절차 마련** 등을 위한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 개정(‘21.3월)(문화부)
- (산업지원 병역의무) 타 보충역 대비 **산업지원 병역의무자의 부당한 복무기간 산정 문제*** 등을 해소하기 위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(‘21.6월)(병무청)
 - * (당초) 산업지원 병역의무자 편입 취소 시 공익법무관, 예술·체육요원 등과 달리 기존 복무기간의 1/4만 인정되어 병역의무 이행 지연 → (개선) 타 보충역과 같게 개정 완료
- (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수수료) **미응시자의 불합리한 비용 지불** 방지를 위한 응시수수료 **차수별 분리징수**, 응시수수료 **사후 환불제도** 도입을 위한 자격시험별 지침 개정*(권익위)
 - * 응시수수료 분리징수 : 소방안전교육사(‘20.12월),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(‘21.5월)
응시수수료 환불개선 : 공인회계사 및 나무의사(‘20.11월), 무대예술전문인(‘21.1월) 등
- (공공 문화시설 대관) 대관과정의 **청탁특혜 방지**를 위한 **국가계약절차 준수, 우선대관 특혜 폐지 및 중요정보 공개**를 위한 지침 개정*(권익위)
 - * 국가계약절차 준수 : 대전예술의전당, 강릉아트센터 등
대관심사 공정성 제고 : 국립남도국악원, 대전예술의전당, 군포문화예술회관 등
우선대관 특혜폐지 및 중요정보 공개 : 국립현대미술관, 국립고궁박물관 등
- (학교 주관 교복 구매) 여학생의 **바지교복 신청 등 학생·학부모의 불편 요인 개선***을 위한 학교주관 교복구매 요령 개정(교육부)
 - * ▲교복 신청양식에서 여학생의 바지교복을 기본사양으로 신청 가능토록 변경 ▲입찰시 제시한 사양서와 비교한 납품교복 품질 평가 시행 ▲교복 차수 측정 시 주말포함 5일 이상 기간 확보 등

2 보완 필요사항

□ 일부 과제의 경우 **입법 미비**로 신속한 추진에 한계

-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 등 **적극적 조치**를 위해서는 **법적근거 마련**이 필수적이거나, 일부 과제는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
- ⇒ **금년 하반기 중 법 개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협력 등 입법노력 강화**

[주요 입법 필요 과제]

- ▶ (스포츠 특별사법경찰) **스포츠 윌리센터**에 체육계 인권침해·비리에 대한 **수사권 부여**(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, 국회 심의중)(문화부)
- ▶ (교원 징계위원회) 대학 교원징계위원회 구성 시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 **학생자치기구 추천 외부위원 및 학생 포함** 규정 신설(교육공무원법·사립학교법 개정안, 국회 심의중)(교육부)
- ▶ (전문연구요원) **4촌 이내 친족이 지도교수인 경우** 등에는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할 수 없도록 **대학 내 상피제** 도입(병역법 개정안, 국회 심의중)(병무청)

□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**불공정 사례** 지속 발생

- 기 조치했더라도 **불공정 사례가 재발**하기도 하고,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**새로운 불공정 사례**가 나타나는 경우도 발생
- 우리사회의 가치 중 **공정의 중요성**이 부각되고 있으며, **국민의 기대** 또한 높아지고 있어 **선제적·적극적 조치** 긴요
 - * 부패인식도(‘20) : 일반국민의 48.4%가 ‘우리 사회가 부패하다’고 응답(‘19, 63%)
- ⇒ **불공정 사례 재발** 방지를 위해 기존 정책을 점검·보완하고, **新분야**에서의 **비위·비리 발생** 사전 차단을 위한 **과제 적극 발굴**

Ⅲ. 향후 추진과제

1 공공부문 공정성 확립

◆ **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원천적으로 방지**하고,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**공정성 제고** 노력 강화

□ **공직사회 반부패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** 추가

- (이해충돌 방지법 시행)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시행(‘22.5.19.)에 대비하여 법 시행에 필요한 후속조치 실시 등 준비 만전(권익위)
-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대상 직무 등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시행령 연내 제정 수범자인 공직자 대상 교육 실시 및 대국민 홍보 강화 등 추진(‘21.하)

<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중 시행령 규정 필요사항 >

- ▶ 사적이해관계자 신고·회피·기피 및 조치(제5조, 제7조)
- ▶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·매수 신고 (제6조)
- ▶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(제8조)
- ▶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(제9조)
- ▶ 수의계약 체결 제한 (제12조)
- ▶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(제15조) 등

- (부동산 투기 근절) 공직자의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법령 정비 및 강력한 통제 체계 구축 등 자정노력 강화
- (법령 정비) 「공직자윤리법」 개정 시행(‘21.10.2.) 대비 부동산 관련 재산등록의무자 확대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(~’21.10월)(인사처)
- (업무 혁신)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신규택지 발굴·선정 과정의 정보관리 철저 등 혁신 노력 강화*(‘21.하)(국토부)

* 신규택지 발굴·선정 전 단계 강력한 정보관리대책 수립, 부동산 관련 국토부 소 부서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등(국토부 혁신방안, ‘21.7월 발표)

□ **공공기관 공정성 제고를 위한 조치 강화** 추가

- (청렴도평가 개편)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립 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제도 개편 추진(‘21.하)(권익위)
- 금년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련 측정항목을 새롭게 반영하고, 감점 반영되는 부패사건 평가를 강화하는 등 청렴도 측정 강화
- ※ ‘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일정 :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 및 부패사건 평가(‘21.8~11월) → 개별기관 청렴도 결과 발표(‘21.12월)
- ‘22년부터는 청렴도 측정과 기관의 반부패 노력·실적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하여 기관의 청렴도를 종합 평가하는 체계로 개편
- (공공기관 사규 점검) 국민생활 접점 공공기관 사규에 내재한 부패·불공정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실시(‘21, 99개 대상)(권익위)
- 인사·계약과정의 이해충돌여부 등 내부 경영상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규정 점검 및 개선 조치
- ※ 주요 권고사항(예시) : ▲인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 시 제척·기피·회피 규정 정비 ▲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 2년간 수의계약 금지 등 수의계약 규정 개선 등
- (윤리준법경영)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 마련 및 공기업 시범운영(‘21.하) 등을 통한 윤리준법경영 확산(권익위)
- 시범운영*, 연구용역 등을 거쳐 구체적인 인증기준·절차를 마련, 윤리준법경영 확산을 위한 공기업 대상 인증제도** 시행(‘22)
- * 6개 시범운영기관과 업무협약 체결(‘21.8월, 한국전력공사, 한국가스공사, 한국지역난방공사, 한국토지주택공사, 한국도로공사, 한국수자원공사)
- ** 윤리준법경영 실천 실적이 우수한 기관 인증, 인증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

2 공정한 경쟁기회 제공

◆ **채용·입시** 과정에서 **공정하게 경쟁**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, **공정문화**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

□ **공정채용 문화** 쏠분야 확산

- (대학교원 채용) 국·공립대학에서 교수 등 대학교원 채용 시 심사위원 이해 충돌방지를 위한 장치 마련 등 채용절차 개선(~'21.12월)(교육부) **추가**
- 채용 시 성별·출신고교 등 불필요한 인적사항 요구 방지 및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미반환 관행 해소
- (채용비리 근절) 제4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* 실시('21.7~11월),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의 적정성 등 집중 점검(권익위·기재부·행안부·고용부)
- * 1,281개 기관 대상(공공기관 332개/지방공공기관 693개/기타공직유관단체 256개)
- 조사결과 적발된 채용비위 연루자 처벌 및 피해자 구제 등 사후조치와 함께 제도개선도 병행하는 등 채용비리 근절 노력 지속
- (민간분야 공정채용 확산)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MOU 체결을 통한 협력 강화, 민간기업 대상 채용 컨설팅 등 직접소통채널 구축('21.하, 250개)(교육부)
- * 권역별 설명회 개최, '일터혁신 사업' 등과 연계하여 중소기업 내 공정채용 문화 확산

□ **대입제도의 공정성·투명성** 강화

- (퇴직 입학사정관 취업제한) 퇴직 후 3년 이내 입학사정관의 재취업 제한 규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및 학원법 개정 추진(~'22상)(교육부)
- ※ ▲ (고등교육법 개정) 취업제한 대상 학원 외에 '교습소', '과외교습' 추가
▲ (학원법 개정) 퇴직사정관이 학원 등을 설립·운영 또는 취업 시 행정처분 및 벌칙 신설
- (미래형 대입 준비) 고교교육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공정성과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교육제도를 반영한 미래형 수능 및 대입방향('28학년도 적용) 논의(교육부)

3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

◆ **동등한 자격으로 계약을 맺고,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로할 권리**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**일터 안전망 보강**

□ **공정계약 체결** 지원

- (문화예술계 서면계약) '21 예술인 실태조사('21.6~'22.1월) 등을 통해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 등 추진(문화부)
- (점검 강화) 서면계약 위반에 대한 점검을 정례화(반기별)하고, 방송작가·독립PD 등 문제제기 사업장 현장점검 실시('21.하)
- (표준계약서 확대) 애니메이션(2종)·국제회의(1종)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및 분야별 표준계약서 해설서 제작·배포 등 확대노력 지속('21.하)(문화부)
- (표준계약서 사용 활성화) 정부 지원사업 추진 시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, 사용 점검 및 컨설팅 등을 통해 표준계약서 활용 확대(문화부·과기부)

[분야별 표준계약서 활용 확대방안]

분야	표준계약서 활용 확대방안
프로 스포츠	▶ 프로스포츠 5개 연맹* 표준계약서 사용 추진('21.하~) * 한국배구연맹, 한국프로농구연맹, 한국여자농구연맹, 한국야구위원회, 한국프로축구연맹
만화	▶ 표준계약서 이용 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 우대조항 신설 * 만화진흥법 개정, '21.2월 도종환의원 대표발의
미술	▶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조사 및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('21.11월)
방송	▶ 2021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과제 표준계약서 사용 실태점검('21.하) ▶ 방송분야 외주제작 거래 표준계약서 이용률 조사('21.12월)

□ **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구축**

- (산재보험 적용 확대) 특고 산재보험 적용이 필요·가능한 직종 지속 발굴 등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* 노력 지속(고용부) **추가**
 - * ('20.7월) 9→14개, ('21.7월) 소프트웨어 프리랜서, ('22) 마트·물류 유통기사 등 검토
- (가입 확대) 더 많은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종사자 전속성 기준 폐지를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 등 입법 추진('21.하)
 - * (현행) 산재보험법상 '주로 하나의 사업'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만 적용 → (개선) '다른 사람의 사업'에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·플랫폼 종사자로 확대
- (기업책임 강화) 중대재해처벌법 시행('22.1.27.)을 위한 하위법령 마련('21.하), 소규모 기업(50인 미만 기업 등)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 중대산업재해 예방 노력(고용부) **추가**

[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]

- ▶ (주요 내용) ▲중대산업재해·시민재해 구분 ▲CEO 등 안전보건조치 의무 ▲의무위반 +사망재해 시 (개인) 1년이상 징역, 10억원이하 벌금, (법인) 50억원 이하 벌금 등
- ▶ (단계적 적용) ▲50인이상 : '22.1.월~ ▲5~49인 : '24.1.월~

-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에 대한 본사 감독·특별 감독 등 관리 강화

※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사항을 엄중히 수사·감독

- (직장 내 괴롭힘 개선) 고객 폭언 보호조치 강화*(산안법 개정 시행 '21.10.13.) 대비 상담센터 확대 운영(8→10개소) 및 소규모 사업장 예방교육 지원('21.하)(고용부)
 - *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·폭행 등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의 보호조치 및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 부여

- (일터별 맞춤형 지원) '영화현장 일터괴롭힘 대응 가이드라인' 현장 안착을 위한 영화 협·단체 홍보 및 교육 실시(~'21.12월)(문체부)
- (운송종사자) 코로나19로 업무부담이 증가한 택배·배달업종 종사자들의 건강권 보호,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**추가**
 - (택배) 택배종사자 표준계약서('21.7월 적용) 사용 점검 및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해 마련된 사회적 합의 사항('21.6월)의 충실한 이행 지원 등 택배종사자 보호 노력 지속('21.하)(국토부)
 - (배달) 배달플랫폼 사용 종사자의 안전·보건 기본권 확보를 위해 배달플랫폼(App) 연동 확대 및 적정 배달 시간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안전 배달시간 산출 방안 마련('21.하)(고용부)
 - * 업체에서 요청하는 시간 내에 배달하기 위해 교통법규 위반 및 안전사고 사례 등 다수 발생

□ **취약계층·직종의 정당한 권익 보호 강화**

- (직업계고 현장실습생) 알 권리와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운영 과정의 학생 참여 및 정보공개 확대방안 마련(~'21.12월)(교육부·고용부) **추가**
 - 학교별 현장실습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보장, 현장실습 정보 사전안내 강화 및 이전 실습생의 현장실습 만족도 결과 공개를 위한 지침 등 개정
- ('열정페이' 해소) 저임금, 장시간 노동 등 근로여건 취약 직종의 보호 강화를 위해 직종별 실태조사 강화 및 근로감독 등 개선조치 시행
 - (실태조사) 방송제작 노동환경 실태조사(~'21.12월), 예술인 실태조사(~'22.1월) 등을 통해 근로환경 파악 및 근로여건 개선 추진(문체부)
 - (근로감독) 여성장애인·외국인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집중 근로 감독 실시('21.하)(고용부)
 - *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, 시정지시 등 후속조치 진행 예정

- (공공부문 공무원 등) 정규직 전환 미결정 기관 대상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, 신규채용 시 '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' 지속 확산(고용부)
-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 인사관리를 위한 '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 가이드라인' 마련 및 공정한 처우를 위한 임금체계 개선 논의 추진(21.하~) **추가**

□ 성평등 직장문화 조성

- (여성·가족 친화 기업 확대) 여성·가족 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고,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·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*에 대한 지원 강화(여가부) **추가**
- * 여성·가족·청소년 분야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 지정 후 기업진단 및 인증전환 지원, 맞춤형 자문 등 실시(21.상 기준 총 128개 지정)
- 여성가족분야 사회적경제조직 모델* 개발 추진(22~)
- * 가사서비스 종사자 권리 보장을 지원하는 협동조합, 다양한 가족 지원 모델 등
- (여성과학기술인 육성)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일·가정 양립 지원 등을 통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토대 조성(과기부) **추가**
- 여성과기인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지원 강화*, 여성과기인 활용 실태조사 등 실시
- * R&D 경력복귀지원(398→450명), 대체인력 지원(40→80명), 연구과제 신청 시 육아휴직 기간 경력산정 제외 등
- (교육 강화) 기관장 등 고위직 대상으로 위계·위력에 대한 인식 차이 및 성인지 감수성 체감을 위한 사례 중심 교육 콘텐츠* 개발 (~'21.12월)(여가부)
- * 소규모 토론 등에서 활용 가능한 교재, 워크북 등 교육 자료

4 불공정행위 사전예방 및 적발·제재 강화

- ◆ 불공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체계 정비와 함께, 발생한 불공정행위는 철저히 적발하고, 엄정 처벌·조치하여 불공정행위 근절 분위기 조성

□ 민간위탁·예산지원 사업의 공정성·투명성 강화 **추가**

- (공연예술분야 공모·지원 사업) 대상기관 심사·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 과정의 객관성 담보 및 투명성 강화(21.하)(권익위 권고, 문체부/각 지자체 이행)
- ▲심사위원 선정기준 개선·공개 ▲심사위원의 사업참여 제한 등 이해 충돌방지 강화 ▲문화예술지원사업 예산의 중복지원 제한방안
- (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)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선정·운영방식 개선(22)(권익위 권고, 복지부 이행)
- ▲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개선* ▲인력채용 시 시설장 자격요건의 구체화 ▲채용공고 정보 공개 확대** 등
- * 외부위원 자격기준 및 참여비율 개선, 선정결과의 공개 규정 마련 등
- ** 공개모집 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반드시 포함하여 공고

□ 사회보험 부정수급 근절 **추가**

- (장기요양보험) 장기요양기관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획 현지조사 추진(21.6~10월)*, 위법행위는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(복지부)
- * 장기요양기관 40개소 대상, 대표자이면서 종사자로 등록된 자의 실제 근무 여부 및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등 주요 부정청구사례 조사
- (건강보험) 요양병원 진료비 적정 청구 유도를 위해 요양병원 현황 및 환자분류군 상향 청구 여부 등 실태 파악(21.10월~)(복지부)

□ **교육 분야 공정성 제고**

- (사립학교 감사 강화) 개교 이후 **종합감사 미수감 주요 대학 4교 종합 감사*** 실시(~'21.12월) 등 사학혁신 노력 지속(교육부)
 - * '19년부터 대규모 16개 사립대학 종합감사 추진 중으로, 현재까지 12개 종합감사 실시
 - (중소규모 대학) 종합감사 미수감 **중·소규모 대학 94개교 대상 종합 감사** 추진('22~'26)
- (예산집행 적정성 확보) **학생지도비 집행실태 점검**을 위한 **국립대학 감사 실시** 및 **예산 집행의 적정성 제고** 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('21.하~)(교육부) **추가**

□ **체육계 인권 보호를 위한 체계적 지원**

- (피해자 보호) **피해자 화해·조정 시범 프로그램 운영**('21.12월~), **간편 상담신고체계 구축**('22~) 등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(문체부)
- (통합시스템 구축) **지역체육회, 종목단체** 등의 **신고·처리 접수 현황을 점검**하기 위한 **시스템 구축·정비***(문체부)
 - * 신고상담이력 관리시스템 구축(~'21.8월),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구축(~'21.12월), 통합징계 정보시스템 연계(~'22) 등
- (인권 향상) **체육현장 실태조사(~'21.12월)**를 통한 사각지대 보호 강화, **의무적 인권 교육 시행*** 등을 통한 인권 존중 문화 확산(문체부)
 - * 선수·지도자·체육단체 임직원 대상 매년 1시간 이상 의무적 인권 교육 실시('21.하~), 체육인 대상 (성)폭력 예방교육('21.6~9월) 실시 등

붙임1

주요 추진실적(요약)

구분	영역	추진실적
공정한 경쟁기회 제공	채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[공공]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별점검 실시('21.3~4월) 등을 통한 부적정 채용사례 적발·조치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▲ 지방공공기관 필기 또는 구조화 면접 도입을 위한 지침 개정('21.1월) ▲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 확산(도입률 '19년 77.9%→ '20년 88.4%) ▶ [민간] 사립학교 사무직원 공개채용 및 부정행위자 조치를 위한 사립 학교법 개정('21.8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▲ 채용절차법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지도점검('21.4~6월) ▲ 공정채용-블라인드 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('20.12월)
	입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[전형 간 균형 확보] '23학년도까지 서울 소재 16교 수능위주전형 40% 이상 확대 추진('22학년도 9교, '23학년도 7교) ▶ [대입전형 단순화] 수능위주전형 및 학생부위주 전형으로 단순화하고, 논술위주전형 및 특기자전형 비율 감축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논술·특기자전형 : ('19학년도) 5.4% → ('20학년도) 4.5% → ('21학년도) 4.3% → ('22학년도) 4.3% → ('23학년도) 4.2% ▶ [대입개편 추진] 2028학년도 대입개편안 마련을 위한 미래형 대입개편 방향 정책연구 추진('21.4월~)
공정한 근로환경 조성	계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[서면계약 정책]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위반 신고·상담창구 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▲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특별전담반 운영(당/협/단체 등 참여 '20.9월~) ▲ 문체부·고용부 합동 서면계약 현장점검('20.11월~'21.2월 4회 실시) ▶ [표준계약서 확산] 정부지원 사업 추진 시 표준계약서 의무 사용(출판·미술 분야 등), 표준계약서 사용 시 인센티브 제공(평가 반영, 우대금리 적용 등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▲ (표준계약서 제정) 퀵대리·배달기사('20.10월), 야구 등 프로스포츠 분야 5종('21.6월) ▲ (표준계약서 개정) 공연예술 분야('21.6월)
	안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[하청노동자 보호] 대형사업장 등 보호조치 실태점검('20.10~11월 400개소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▲ 원청의 산재보험료에 하청의 산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산재제도 개편(보험료징수법 개정 '21.4월) ▶ [직장 내 괴롭힘 금지] 사용자 조치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(근로기준법 개정 '21.4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▲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특별근로 감독 실시(네이버주식회사 등) ▶ [대학생 현장실습] 열정페이 논란 해소를 위한 현장실습 지원비 지급 근거 마련, 상해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(산학협력법 개정 '20.12월)

구분	영역	추진실적
불공정행위 처벌 강화	성평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[민간 확산] 상장법인 성별임원 현황 조사·발표('19년 4.0% → '21년 5.2%) 산업단지(경북) 내 문화개선 컨설팅 제공(21년 25개사) ▶ [일·가정 양립] 가족친화 인증기업·기관 확대('20년 기준 4,340개), 인센티브 제공 강화('21.5월 기준 229개)
	체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[스포츠윤리센터] 체육계 인권보호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의 직권 조사 권한 명시, 조사 방해·거부 시 징계요구 등 조사권 강화('21.2월~) ▶ [학생선수 보호]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('20.7~12월), 인권보호 및 폭력근절 방안 등 범부처 대책 발표('20.12월 '21.2월) ▶ [기해자 제재] 선수에게 (성)폭력, 부정·비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 최대 5년간 지도자 자격정지(기준 최대 1년) 조치('21.6월~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▲체육지도자 채용 시 징계이력 증명서 확인 의무화 ▲비위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 임직원 등의 명단 공표
	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[사립대학 감사] 연세대·고려대 등 대규모 12개 사립대학 종합감사 실시('19.7~'21.7월) ▶ [교원자격 제한] 성범죄자의 교직 진입 원천 차단을 위한 초·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('21.6월)
	문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[콘텐츠분야] 콘텐츠공정성생성센터의 기능·역할 강화, 협단체 연계 장르별 신고센터 확대 및 피해상담·피해구제 소송비 지원 실시 ▶ [문화산업분야]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의무화, 임금체불 제작사 영업제재 정부지원 배제를 위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하위법령 개정('21.6월)
국민 삶 속 불공정 해소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[SNS상 부당광고 근절] 일명 '뒷광고' 방지를 위한 집중 모니터링 실시 ('21.4월~), 인플루언서 등 대상 표시광고법 교육 제공('21.6월) ▶ [산업지원 병역의무] 타 보충역 대비 산업지원 병역의무자의 부당한 복무기간 산정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('21.6월) ▶ [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수수료] 응시수수료 차수별 분리징수, 응시수수료 사후 환불제도 도입을 위한 자격시험법 지침 개정 ▶ [공공 문화시설 대관] 대관과정의 청탁특혜 방지를 위한 국가계약절차 준수, 우선대관 특혜 폐지 및 중요정보 공개를 위한 지침 개정 ▶ [학교 주관 교복 구매] 여학생의 바지교복 신청 등 학생·학부모의 불편 요인 개선을 위한 학교주관 교복구매 요령 개정

붙임2

세부과제별 추진현황

※ 완료 31개, 정상추진 49개

세부과제명	진행단계	평가
1. 공정한 경쟁기회 제공		
(1) 채용 공정성 제고		
① 모든 공공기관에서 필기 또는 구조화된 면접으로 채용 추진	계속	● 정상
② 채용기준 임의해석 방지를 위한 관련 지침 보완	지침보완 완료	● 완료
③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 확산	계속	● 정상
④ 정규직 전환 시 공정채용 준수 안내 강화	계속	● 정상
⑤ 공공기관 위탁채용 가이드라인 마련·배포	가이드라인 마련·배포	● 완료
⑥ 공공기관 간 채용대행업체 정보 공유방안 마련	공유방안 마련	● 완료
⑦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부정비리 조치 관련 사립학교법 개정	법 개정 완료	● 완료
⑧ 사립학교 교원채용 교육청 위탁 확대 관련 시도교육청 협의	계속	● 정상
⑨ 경제단체 등과 협력하여 공정채용 우수사례 확대, 컨설팅 제공	계속	● 정상
⑩ 채용절차법 위반 신고기간 운영 및 조사 등 실시	계속	● 정상
⑪ 실제 사례 중심 성평등 채용 교육 콘텐츠 제작·배포	계속	● 정상
(2) 대학 입시 공정성 강화		
⑫ 대입 공정성 확보방안 지속적 이행 점검	계속	● 정상
⑬ 2028학년도 대입개편안 마련 준비 착수	연구용역 추진	● 정상
2.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		
(1) 불공정 계약 방지		
⑭ 문화예술분야 서면계약 위반 신고접수 창구 확대, 계약서 작성 지원	계속	● 정상
⑮ 예술인, 사용자(기획업자) 대상 교육 확대, 온라인 교육기반 확충	계속	● 정상
⑯ 문체부·고용부 합동 서면계약 현장점검 실시	현장점검 실시	● 완료
⑰ 표준계약서 신규개발 및 개정·보완 지속	계속	● 정상
⑱ 정부지원사업 추진 시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	계속	● 정상
⑲ 방송사 재허가·재승인 시 표준계약서 활용 관련 조건 부가	조건 부가	● 완료
⑳ 방송사-외주제작사간 표준계약서 사용실태 조사	실태조사 실시	● 완료
(2) 안전한 일터 조성		
㉑ 공공기관, 대형사업장 등의 하청노동자 보호실태 점검	실태점검 실시	● 완료
㉒ 원·하청 산재통합관리제 개선	법 개정 완료	● 완료
㉓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 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	법 개정 완료	● 완료

세부과제명	진행단계	평가
㉔ 직장 내 괴롭힘 개선지도 미이행 사업장 대상 근로감독 강화	계속	● 정상
㉕ 직장 내 괴롭힘 5인 미만 기업 적용 확대 검토	연구용역 추진	● 정상
㉖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활성화 및 캠페인 확대	계속	● 정상
㉗ 고객 폭언 등으로부터의 사업주 보호조치 대상 확대	법 개정 완료	● 완료
㉘ 감정노동 고위험 업종 대상 컨설팅 제공	계속	● 정상
㉙ 방문노동자 건강장해 예방·사후조치 지침 마련	지침 마련	● 완료
㉚ 영화현장 일터괴롭힘 가이드라인 마련	가이드라인 마련	● 완료
㉛ 매니저, 영화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 추진	실태조사 실시	● 완료
㉜ 대학생 표준현장실습지원비 지급기준 마련	법 개정 완료	● 완료
㉝ 대학의 상해보험 의무가입 실시	법 개정 완료	● 완료
㉞ 부적정한 실습상황 시 적극 대응 및 실습 관련 교육 실시	계속	● 정상
㉟ 부처별 의무실습 운영기준 및 절차 마련	계속	● 정상
㊱ 열정페이 직종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	계속	● 정상
㊲ 패션스타일리스트 어시스턴트 등 근로감독 실시	계속	● 정상

(3) 성평등한 직장문화 조성

㉞ 경북 산업단지 기업 대상 성별다양성 제고 컨설팅 신설	계속	● 정상
㉟ 중소기업, 벤처 등 자율협약 대상기업 확대	계속	● 정상
㊱ 상장법인 성별 임원현황 조사·발표 정례화	계속	● 정상
㊲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발굴 확대	계속	● 정상
㊳ 가족친화제도 인증제 내실화	계속	● 정상
㊴ 공공부문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지속 추진	계속	● 정상
㊵ 성희롱·성폭력 표준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사례 중심 콘텐츠 보급	계속	● 정상

3. 불공정행위 처벌 강화

(1) 체육계 불공정행위 엄정 처벌

㉕ 스포츠유리센터 협조의무 부과, 위반 시 책임자 징계요구 근거 마련	법 개정 완료	● 완료
㉖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포츠유리센터 공간분리 및 기능 강화	법 개정 완료	● 완료
㉗ 스포츠유리센터 특별사법경찰 도입	법안 국회 심의 중	● 정상
㉘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구축	계속	● 정상
㉙ 매년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실태 조사 실시	계속	● 정상
㉚ 대한체육회 지도자 등록 시 체육지도자 자격 보유 의무화	법 개정 완료	● 완료
㉛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설치 및 2년주기 재교육 의무화	법 개정 완료	● 완료
㉜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제도개선안 마련	대책 마련	● 완료

세부과제명	진행단계	평가
㉕ 학교운동부지도자 인권·직무교육 의무화, 사안발생 시 징계 등 처분 강화	법·시행령 개정 완료	● 완료
㉖ 학부모 혼란장·기숙사 등 사적출입 금지 등 사적접촉 차단	기본계획 반영	● 완료
㉗ 체육계 전반에 대한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	발표 완료	● 완료
㉘ 지방체육회 성과평가 시 인권침해 지표 반영, 보조금과 연계	계속	● 정상
㉙ 종목단체 재정 지원 확대, 경영·마케팅 컨설팅 실시	계속	● 정상

(2) 교육계 불공정행위 엄정 처벌

㉕ 16개 주요 사립대학 종합감사 실시	12교 실시	● 정상
㉖ 사학감사 전문인력 증원 노력 지속	계속	● 정상
㉗ 관할청의 사무직원 징계·해임 요구 등 제재 근거 마련	법안 국회 심의 중	● 정상
㉘ 중대비리 교직원 징계결과 관련 징계재심의 기구 설치	법안 국회 심의 중	● 정상
㉙ 사립교원 강등처분 규정 및 징계결과 피해자 통보 규정 신설	법 개정 완료	● 완료
㉚ 성비위 징계 교원 담임배제 규정 신설	법 개정 완료	● 완료
㉛ 교원 아동·청소년 성범죄 등으로 수사 개시 시 직위해제 규정 신설	법안 국회 심의 중	● 정상
㉜ 성범죄 관련 형사처벌 이력을 교원자격 취득 제한 요건으로 규정	법 개정 완료	● 완료
㉝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 대학 교원징계위에 학생 등 포함토록 규정	법안 국회 심의 중	● 정상
㉞ 사립학교 교원징계위 구성원 수를 국·공립과 동일하게 규정	법안 국회 심의 중	● 정상

(3) 문화예술계 공정한 제작환경 조성

㉕ 문화산업상생협력법 발의 및 콘텐츠공정상생센터 기능·역할 강화	계속	● 정상
㉖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불공정행위 예방 및 제재조항 신설	법 개정 완료	● 완료
㉗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법정교육 강화, 연예인·연습생 상담·교육 지원	계속	● 정상

4. 국민 삶 속 불공정 해소

㉕ SNS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자율준수 유도	계속	● 정상
㉖ SNS 부당광고를 한 광고주, 유명인(인플루언서 등) 제재	계속	● 정상
㉗ 콘텐츠 구독서비스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한 보호지침 개정	지침 개정	● 완료
㉘ 전문연구요원 복무 시 지도교수의 4촌 이내 혈족 편입 제한	법안 국회 심의 중	● 정상
㉙ 산업지원 병역의무자 편입취소 시 잔여 복무기간 산정 제도 개선	시행령·훈령 개정 완료	● 완료
㉚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차수별 구분·징수, 사후환불 제도 도입	계속	● 정상
㉛ 학교주관 교복 구매 불합리성 해소를 위한 교복구매 요령 개정	개정 완료	● 완료
㉜ 공공 문화시설 대관 시 국가 계약법령의 입찰공고 일반절차 준용	계속	● 정상
㉝ 공공 문화시설 대관심의회 공정성 제고	계속	● 정상
㉞ 공공 문화시설 우선대관 규정 폐지, 대관절차 홈페이지 공개	계속	● 정상

세부과제명	소관	일정
1. 공공부문 공정성 확립		
(1) 공직사회 반부패 청렴 문화 정착 추가		
①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시행(22.5.19.) 대비 시행령 제정, 교육홍보 추진	권익위	'21.하
② 「공직자윤리법」 개정 시행(21.10.2.) 대비 시행령 개정	인사처	'21.10월
③ 신규택지 발굴·선정 과정의 정보관리대책 수립 등 혁신노력 강화	국토부	'21.하
(2) 공공기관 공정성 제고 추가		
④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제도 개편 추진	권익위	'21.하~'22
⑤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실시	권익위	'21.하
⑥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 마련 및 공기업 시범운영	권익위	'21.하
2. 공정한 경쟁기회 제공		
(1) 공정채용 문화 확산		
⑦ 국·공립 대학 교원 채용 시 심사위원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 추가	교육부	'21.하
⑧ 제4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실시	권익위 기재부 행안부 고용부	'21.7~11월
⑨ 민간분야 공정채용 확산을 위한 MOU 체결, 컨설팅 등 실시	고용부	계속
(2) 대입제도 공정성·투명성 강화		
⑩ 퇴직 입학사정관 재취업 제한 관련 고등교육법·학원법 개정 추진	교육부	~'22.상
⑪ 미래형 수능 및 대입방향('28학년도 적용) 논의	교육부	계속
3.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		
(1) 공정계약 체결 지원		
⑫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실태 파악 등을 위한 '21 예술인 실태조사 실시	문체부	'21.6~'22.1월
⑬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위반 합동점검 정례화 및 현장점검 실시	문체부	'21.하
⑭ 애니메이션(2종)·국제회의(1종)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	문체부	'21.하
⑮ 정부 지원사업 추진 시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을 통한 활용 확대	문체부 과기부	'21.하
(2)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구축		
⑯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직종 추가 발굴 추가	고용부	계속
⑰ 종사자 전속성 기준 폐지를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 추진 추가	고용부	'21.하
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하위법령 마련 추가	법무부 고용부 환경부 국토부 등	'21.하
⑲ 소규모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,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 관리 강화 추가	고용부	계속

세부과제명	소관	일정
⑳ 고객 폭언 보호조치 강화 대비 상담센터 확대 운영, 예방교육 지원	고용부	'21.하
㉑ 영화현장 일터괴롭힘 대응 가이드라인 홍보·교육 실시	문체부	'21.하
㉒ 택배종사자 표준계약서 사용 점검 추가	국토부	'21.하
㉓ 택배기사 과로방지 관련 사회적 합의 사항('21.6월) 이행 지원 추가	국토부	'21.하
㉔ 배달플랫폼 연동 확대 및 안전 배달시간 산출방안 마련 추가	고용부	'21.하
(3) 취약직종 권익 보호 강화		
㉕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과정의 학생 참여 및 정보공개 확대방안 마련 추가	교육부 고용부	'21.하
㉖ 방송제작 노동환경 실태조사, 예술인 실태조사 등 실시	문체부	'21.하
㉗ 여성장애인, 외국인 등 취약직종 근로감독 실시	고용부	'21.하
㉘ 정규직 전환 미결정기관 컨설팅,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지속 확산	고용부	계속
㉙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및 임금체계 개선 논의 추가	고용부	'21.하
㉚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원 및 여성가족분야 사회적경제조직 모델 개발 추진 추가	여가부	'21.하
㉛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일·가정 양립 환경 조성 추가	과기부	계속
㉜ 고위직 대상 성인직 감수성 체감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	여가부	'21.하
4. 불공정행위 사전예방 및 적발·제재 강화		
(1) 민간위탁·예산지원 사업의 공정성·투명성 강화 추가		
㉝ 공연예술분야 공모·지원사업 심사과정의 투명성 강화	문체부/지자체	'21.하
㉞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시설 선정·운영방식 개선	복지부	'22
(2) 사회보험 부정수급 근절 추가		
㉟ 장기요양보험 기획 현지조사 실시	복지부	'21.6~10월
㊱ 건강보험 요양병원 현황 및 환자분류군 상향청구 등 실태조사 실시	복지부	'21.10월~
(3) 교육 분야 공정성 제고		
㊲ 대규모 사립학교 4교 종합감사 실시	교육부	'21.하
㊳ 중·소규모 대학 94교 종합감사 실시	교육부	'22~'26
㊴ 국립대학 학생지도비 집행 감사 실시 및 제도 개선 추진 추가	교육부	'21.하~
(4) 체육계 인권 보호를 위한 체계적 지원		
㊵ 체육계 인권 보호 관련 피해자 화해·조정 시범 프로그램 운영	문체부	'21.12월~
㊶ 간편상담신고체계 구축	문체부	'22
㊷ 지역체육회, 종목단체 등의 신고·처리 접수현황 점검 시스템 구축	문체부	'21.하~'22
㊸ 체육현장 실태조사 실시, 의무적 인권교육 시행	문체부	'21.하